

與 ‘AI 대전환’, 野 ‘기업 활력’… 1호에 담긴 정책 승부수

정당별 10대 공약 공개

與, 기술 초격차로 미래 먹거리 확보
데이터 인프라·민간 자금 유치 주력

野, 시장 자율로 기업 환경 다시 설계
노동 유연화·세 부담 완화 카드 꺼내

개혁신당, 정부조직 슬림화 운영 혁신
부처통합·예산기획 이관 구조조정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2일, 각 정당들이 10대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고 국민의힘은 자본, 기술, 노동 3대 혁신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각 정당 모두 국제 정세 급변과 저성장 국면 돌입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21대 대선 아젠다로 보고 관련 공약을 우선 순위에 배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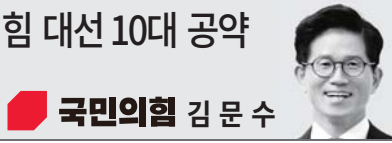
민주당은 기존 업무방식을 AI 중심으로 바꾸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약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대선 10대 공약

민주당 이재명

-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2 내란극복, K-민주주의 위상 회복으로 민주주의 강국
- 3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
-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강국
-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6 세종 행정수도 및 '5국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
-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 8 생활안정으로 아동·청년·어르신 등 모두가 잘사는 나라
- 9 저출생·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고 아이·어르신 함께 돌보는 국가
- 10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



국민의힘 김문수

- 1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 2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
- 3 청년이 크는 나라, 미래가 열리는 대한민국
- 4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5 중산층 자산증식, 기회의 나라
- 6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 7 소상공인, 민생이 살아나는 서민경제
- 8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 9 득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
- 10 복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안보

속했다. 이를 위해 AI 예산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AI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고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를 5만개 이상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K-컬처 산업과 K-방산 산업을 육성해 세계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앞당기고 국민편드 조성, 과감한 세제혜택, 맞춤형 자금공급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규모 집중투자하겠다고 했다. 또한 안정적 R&D(연구·개발) 예산 확대와 벤처투자시장 육성으로 글

로벌 4대 벤처강국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거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 1호 공약을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분과 2025~2030년 연간 총수입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정책본부는 “이번 민주당의 ‘10대 정책공약’은 ‘회복·성장·행복’ 등 3대 비전으로 국민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10개 분야로 정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 위기 극복을 통해 행정질서를 ‘회복’하고, 급변하는 대외환경, 저출생,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기술·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 철폐하고 미래산업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업에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공약도 내놔다.

국민의힘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즉시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관세 패키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추가로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한 주52시간제 개선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로 산업용 전기료 인하 추진 ▲법인세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정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세금, 부담금 감면 등 우대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재원을 활용해 1호 공약에 추가로 드는 재정 소요가 없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은 “1호 공약은 미중 무역전쟁 등의 경제 위기와 국내 정치적 혼란의 시기에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하여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는 김문수 후보의 비전이 반영된 핵심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1호 공약을 선보였다. 개혁신당은 “부처 간 소관 분야 중복과 행정의 칸막이 문제를 최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정부 운영”을 하겠다고며 현 19부처를 13부처로 통폐합 및 개편하겠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보장 중심’ vs 金 ‘성장 전략’… 두 갈래로 나뉜 경제 해법

금융공약 ‘정면 승부’

이재명, 노후보장·시장 정비 강조
정년 연장·수수료·코인 발행 추진

김문수, 청년 제도개편 방안 내놔
2차 연금개혁·공공기관 투자 허용

오는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연금개혁·가상자산 등 금융부문 주요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주요 공약과 추진 계획을 정리한 ‘10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했다. 앞서 인터뷰나 경선 과정 등에서 발표했던 일부 공약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금개혁·청년지원 등 이번 대선의 쟁점으로 꼽히는 분야에 관한 공약을 다수 포함했다.

◆李 “노년 보장 강화해야” vs 金 “청년 부담 줄여야”

연금개혁 공약에서 김문수 후보는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2차 연금개혁’을 약속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연금 본연의 ‘노후 보장’ 기능을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현행 국민연금에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도록 하는 ‘2차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논의부터 입법의 모든 과정에 청년 세대가 참여하는 ‘2차 연금개혁’을 즉각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등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재정 개선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지급을 담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을 통해 국민연금 지급 나이에 맞춘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이달 초에는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지급액을 감액하는 ‘삭감제도’를 폐지하고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노령연금)

을 수급하면 각각 20%를 삭감해 지급하는 부부 감액 제도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본연의 역할인 ‘노후 보장’ 강화가 목표다.

◆“공공기관 시장 참여” vs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두 후보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공약에서도 맞붙었다. 올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600만명을 넘겼고, 주요 가상자산 가격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가상자산이 주요 투자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현물 기반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세부 공약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김문수 후보는 10대 공약에 가상자산 시장에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량 증대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대하고, 기관의 투자 수익성 및 경쟁력을 향상하겠다는 의도다.

김 후보는 앞서 총리실 산하 가상자산 육성·감독 위원회 설치, 가상자산 관리·감독 체계 신설 등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육성에 주안점을 둔 공약도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에 관한 내용을 10대 공약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과 관련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특정 통화와 1대1로 대응하는 가상자산)’의 출범을 지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함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만큼,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또한 기존 ‘1거래소 1은행’ 제도 폐지, 거래소 수수료 상한제, 수수료 비교 플랫폼 구축 등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약도

함께 약속했다.

◆“청년에 양질의 기회 제공” vs “구직 청년 부담 완화”

각종 청년지원 방안도 눈에 띈다. 김문수 후보는 대기업 신입 공채 확대, 청년 스타트업 창업 지원, AI·수출입 전문인력 육성 등 청년의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또한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결혼·출산 시 최장 9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특례 대출 확대 등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구직지원활동금 확대 등 청년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의 출시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월세 지원 확대 등 주거 지원 방안도 약속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성장엔진 재점화’ 외쳤지만… 현장선 규제완화 절실

중기중앙회, 中企 정책개선 논의
주 52시간제·최저임금 등 유연화 촉구
제조업·벤처 업계 ‘현실 체감형’ 호소

중소기업계가 차기 정부에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노동 유연성과 정책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 중심축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분회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 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주안 첫 행사이자,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문 성격의 행사다. 현장에서는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 컨트롤타워 신설, 인공지능(AI) 기술지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

령에게 가장 요구하는 덕목으로 ‘경제 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에 손발이 묶여 납기 대응이나 연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과의 제도 형평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

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에 머물러 있어 역동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성장 기업 중 20%가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라는 현실은 구조적 변화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가 차기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중대재해

처벌법 개선 등 노동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금융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AI 기술 도입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이다.

종합토론에 나선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통령 직속 ‘중소제조업 혁신전환위원회’를 신설해 전면적인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벤처를 대표해 나온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스타트업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의 한계는 매우 뚜렷하다”며 체감도 높은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최빛나 기자 vitna@